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번 주 윤곽… 전남 유치 기대 커진다

산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기후탄소실 때어 새 부처 만들어
국정기획위, 조직 개편 곧 발표…정청래 민주당 대표 ‘호남 보답’ 공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설립 윤곽이 이번 주 안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기능을 강화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만약 부처 신설이 결정된다면 어디에 유치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호남 보답’을 공언했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유치 공약을 내뱉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때어 새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현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받아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광복절을 즈음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포함한 일부 국정 과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8월 15일 이전에 정리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논의 방향대로라면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나 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상공자원부는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어졌다.

산업부가 외교통상부 시절(2005~2013년) 통상 기능을 외교 부처에 넘겨준 적은 있었지만 에너지 기능을 댄 적은 없었다.

전통적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오일쇼크 등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각별히 중요하게 여겨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상·산업과 분리하는 데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설 혹은 확대 중 하나로, 기후 위기 전담부처의 윤곽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 출범이후 발 빠르게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공언하고 나섰고, 나주시는 기후에너지부를 위한 임시 청사와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약속했고, 취임 이후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냉랭하던 남북관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이 지난 4~5일에 걸쳐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1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임진강변의 북한군 초소와 대남확성기. /연합뉴스

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작전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 우려
추미애 “선택적모병제 도입 필요”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크게 하락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고 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 사고 빠르게 직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첫 휴가를 보낸 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데에 (지시의) 방향이 짚

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 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